

한국의 경제개발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제언—

김 영 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임 현 진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 | <차례> | |
|---------------------------------|-----------------------------------|
| 1. 머릿말 | 뮤니케이션 : 작용과 반작용 |
| 2. 발전정책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제반 이론 | 가.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위상 |
| 가. 경제성장의 시작 | 나. 국민경제의 성장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 나. 성장과 균형의 시작 | 4. 자립적 발전을 위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
| 다. 종속과 이탈의 시작 | 5. 요약과 결론 |
| 라. 자립적 발전의 시작 | |
| 3. 한국의 경제개발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 |

1. 머릿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식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를 가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지식산업 중에서도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사회적으로 갖는 중요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대(對)사회적 기능 중에서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그것이 결과하는 효과와 역효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종속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물신화된 산업화의 추구로 말미암아 Mattelart가 지적하고 있듯이 “Money Works, Capital Produces & Media Acts”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Mattelart 1978, p. 13). 따라서 국가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유인과 강압의

* 이 논문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한국사회의 변동과 커뮤니케이션」(춘천, 1986년 8. 29~30)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기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한다. 이를바 ‘국가계획의 발언대’로서 (Schramm 1963, p.39)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도 하며 또한 그것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국민들에게 전전치 못한 소비문화를 주입시켜 주거나 과도한 기대상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며 또한 그것의 극복을 위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기에 경제개발정책을 둘러싸고 언론과 국가 사이에 긴장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일면을 엿볼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자립적 발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62년 제Ⅰ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래 줄곧 그 기조를 이루어 온 것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발전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경제성장의 자립적 기반이 미약해 외국의 자본·기술·원자재·시장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일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정책은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분배의 격차와 외채의 누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지나치게 물량적인 성장지상주의의 기조 위에서 수출증진정책은 중단없이 지속되었으나 그것은 소득분배의 악화와 외자의존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70년대 후반 변모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이러한 성장지상주의 경제정책은 대내외적인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발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다다르게 된 것 같다. 실제로 성장지상주의로 인한 지역간·계층간·부문간 불균형을 막고 무역개방의 압력과 신보호주의의 장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개편하여 자생적인 발전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드높다.

그런데 대외지향적 발전정책은 성장과정 중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특히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언론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유엔이 60년대를 ‘개발의 년대’(decade of development)로 설정한 이후 후발신생국의 개발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전략상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큰 기대를 두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하던 당시의 박정희정권은 그때까지의 언론행태를 책

임없는 방종으로 못박고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사상적 전통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개발년대의 초기부터 심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와중에서 성장지상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국가에 의해 간단없이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언론은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특성은 상업주의의 팽배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군부엘리트를 주축으로 한 군사정권은 그들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개발에 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는 국가발전의 발언대 혹은 홍보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체제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언론의 정치적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언론의 경제적 측면은 직접 간접으로 활성화시켜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기업성추구에 몰두하였고 그 파생적 결과로서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도입, 언론의 선정주의와 같은 역기능적 요소들이 팽배하게 되었다. 일제 및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아직 그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무규범적 상태에 놓여있던 한국의 전통문화는 경제개발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물어오는 서구의 이질적 문화에 눌려 뒤편으로 물러 앉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언론과 국가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추진에 있어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드파 실을 따져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론으로서 발전정책과 그에 따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개괄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한국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발전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작용과 반작용을 살펴보고 그 공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발전정책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제반이론

제 3 세계의 발전에 관한 논의는 60년대 초반 유엔의 개발년대 선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로 주안점이 맞추어진 이때의 발전전략은 단적으로 서구화로 특징지워진다. 즉 이 당시의 발전이론들은 선진된 서구사회의 구조적·문화적 특성을 근대성(modernity)으로 저개발된 후진국의 그것을 전통성(tradition)으로 양분하여, 제 3 세계의

저발전상태는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시작된 후발신생국들의 경제성장은 이른바 ‘근대화의 좌절’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정체의 부식, 높은 실업률, 부의 집중, 빈곤의 악화를 결과함으로써 그 발전모델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게 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성장과실의 균배에 초점을 맞춘 시각, 종속적인 구조로부터의 이탈에 초점을 맞춘 시각, 자립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시각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Dissanayake 1981, pp. 217-27 참조). 여기서는 먼저 고전적인 입장으로서 경제성장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것들의 발전정책과 커뮤니케이션전략을⁽¹⁾ 개괄해 보기로 하겠다.

가. 경제성장의 시각

이 시각은 국가의 발전을 산업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빠른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자본집약적 기술활용과 중앙집권적인 개발계획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해서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사람이 Rostow이다(Rostow 1961). 그는 경제발전의 단계를 (1) 전통사회 (2)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 (3) 도약단계 (4) 성숙단계 (5) 대중소비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서구 선진산업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일반화한 이러한 분류는 곧 후진국의 경제개발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또한 그 결과의 현재위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서구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이 강조되었으며, 후진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본집약적 산업화의 추진을 당면목표로 설정하였다.

산업화를 발전개발의 핵심으로 보는 만큼 국민총생산(GNP)과 같이 생산에 관련된 계량화지수를 국가발전의 측정기준으로 하는 이 시각은 학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체계론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다.

Schramm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첫번째의 체계론적 커뮤니케이션 관점

(1)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커뮤니케이션의 제도뿐만 아니라 그 규범이나 기술 체계까지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은 T. Parsons, R.K. Merton, H.D. Lasswell 등 일련의 구조기능주의자들의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Schramm 1963, pp. 30-57 참조). Schramm은 사회체계를 ‘상호의존적인 부분들이 그 영역을 지속해 나가는 집합’(boundary maintaining set of interdependent particles)이라고 정의를 했고, Lerner도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대신에 ‘상호작용적’(interactive)(Lerner 1963, p. 329)이라는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부연하자면 근대사회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체계인데 이 체계 속에서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요소들도 모두 효과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구성요소의 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의 활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를 구성요소는 전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전파, 새로운 기술의 전달, 새로운 가치의 보급을 통해 사람들에게 열망(aspiration)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에 부과되는데 이를 통해 인간변혁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곧 국가발전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발전이란 인간변혁 그 자체이며 전체 사회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여 또 하나의 구성요소인 인간에게 열망을 불러 일으켜 변화를 꾀한다면 국가발전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Schramm 1964). 따라서 정보의 양이나 그 전달범위는 곧 발전의 양상이나 속도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목적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Lasswell의 source-message-channel-receiver-effect 모델에서 현대적 전승의 증거를 볼 수 있다(Lasswell 1948). 설득과 조종을 제일의 목적으로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커뮤니케이션관을 계승한 경제성장론자들은 수신자를 설득·조종하려는 송신자(source)의 전략에 주로 관심을 나타냈던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러한 시각은 제2차대전 이후 독립을 쟁취하게 된 신생국의 급격한 근대화정책에 부응하여 지배엘리트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앙집권적 통제 현상을 낳게 된다. 대개의 후발신생국들은 과거 그들을 지배했던 서구의 선진산업사회를 모델로 하여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급속한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이미 근대화된 심성을 지니는 소수 지배엘리트들의 주도면밀한 발전계획과 이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했는데 매스미디어를 통

한 대중동원과 계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정치기구의 부속물’(Sola Pool 1963, pp. 234-253 참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었지만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 오면 언론의 자유는 자연히 확대되어 갈 것으로 파악하여 매스미디어의 통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의 미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투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론자들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전략채택의 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여러가지로 달리 나타났다. 세계경제 안의 부국과 빈국의 격차는 더 늘어 났으며 국내의 지역간·계층간 불평등도 점차 심화되어 갔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오염이나 매스미디어 통제로 인한 정치적 억압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70년대를 통하여 많은 비판들이 경제성장론자들에게 가하여졌다. 그것은 크게 네가지 입장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인종우월론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국가발전에 대한 최상의 관점을 국민개개인의 변화에 있다고 보고,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을 후진국 국민의 미개화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선진국 국민과는 달리 후진국 국민은 피동적이며 숙명론적이고 일을 쉽게 포기하며 융통성이 없으며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시간관념이 없으며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Inkeles & Smith, 1974). 이것은 곧 구조적인 관점의 결과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데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을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역사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단선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서구적인 모델 외에도 쏘비에트적, 중국의 모택동적 혹은 제3의 길 등 여러가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Rogers, 1976).

마지막 비판은 경제적인 측면 외의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집중되고 있다. 유엔이나 유네스코, 국제개발기구 등이 60년대에 제3세계의 경제개발을 위한 물질적·학술적 후원의 결과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원조품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특히 대중매체에 많은 비중이 두어진 이 원조는 그러한 것을 수용하여 운용할 수 없었던 후진국내의 여전상 매체에 담을 내용물이나 그 부속의 대체·보강을 위한 기재를 계속 선진국에 의존하게 되어 문화면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구적인 매체에 실려 들어온 서구적인 가치를 담은 내용물이 국내의 전통적

인 문화를 짐작하는 결과를 빗어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약화시켜 경제·정치적 측면의 서구의존에 한 몫을 더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시각도 궁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시각은 발전논의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눈을 돌리게 한 첫번째 시도이며, 비교적 공고히 다져진 사회철학으로부터 유도되어 나온 것으로서 그 이론체계가 일관되게 잘 다듬어져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발전모델이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집적되어 단순한 일반화나 미사여구의 나열보다는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고자 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일단의 장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장과 균배의 시각

Rogers에 의하면 60년대를 지배했던 경제성장 시각에서는 국가발전의 주된 요소를 산업화, 자본집약적 기술, 경제성장, 계량화로 파악하고 강력한 중앙통제적인 경제성장정책의 추진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성장과 균배의 시각에서는 소득분배, 노동집약적 산업, 분산적 경제계획, 발전에 관한 내생적 요인과 함께 외생적 요인도 강조하게 되었다고 그는 보고 있다(Rogers 1976, pp. 121-148).

이러한 변화는 발전논의가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이제는 삶의 질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눈을 돌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점증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불평등이라는 상황아래에서 경제성장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성장과 균배의 시각은 커뮤니케이션의 전통적 매체와 근대적 매체의 혼합, 적절한 형태의 기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일반대중 참여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사실 저개발국의 발전정책의 채택 결과 나타난 가장 부정적인 모습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였다. 따라서 무엇이 발전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즉 경제성장이 그 사회의 빈곤층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히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하며 그 사회의 실정에 맞는 — 그것이 노동집약적이든 자본집약적이든 — 기술형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전략을 채택함에 있어서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사회구조가 항상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발전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에 관한 의미변화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미변화로 곧바로 직결되는데 기계론적이고 단선적이며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모델이 과정지향적이며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모델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시각의 커뮤니케이션모델이 송신자위주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면, 성장과 균배시각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송·수신자 상호작용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략은 처음에 '개혁의 확산' (Rogers 1983)이라는 개념에 의해 부각되어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수신자의 역할이 다소 강조되었으나 이후 Berlo(1960)나 Barnlund(1970), Rogers and Kincaid(1981)에 의해서야 비로소 체계화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전략은 노동집약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과 균배의 발전논의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를 대인 커뮤니케이션채널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전략이 더 없이 유용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도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각은 일관된 하나의 논리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시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책으로 단지 조립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 논의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을 찾는 가운데서 뒤에서 소개될 세계체계 안에서의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산발적인 의견의 종합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주고 있다. 이에 한가지 덧붙이다면 전통·근대적 매체의 병용, 대중매체·대인채널의 병용이라는 커뮤니케이션전략이 분권적인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그것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막연한 설명에 그칠 뿐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과 거기서 발생할 문제나 한계 그리고 이의 극복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누적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나름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60년대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도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했던 경제성장시각의 근본적인 한계를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다. 종속과 이탈의 시각

이 시각은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발전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계체계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 의존이라 함은 선후진국이 맷고 있는 단순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저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조적인 ‘불균등성’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 발전전략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불균등적인 상호의존의 관계를 제거하는 데 놓여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가진 하나의 세계체계로 자본주의를 파악하고 이러한 연관성이 한 국가에 있어서의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발전전략을 적절히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내변수에 기반한 발전전략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세계체계적인 발전줄거리의 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Nordenstreng & Schiller 1979, p.5).

이러한 종속과 이탈의 시각은 결국 발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에 발전논의의 초점을 맞추던 것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그 관심을 전환한 것이다. 즉, 선진국의 발전과 후진국의 저발전이란 자본주의의 세계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볼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은 세계체계 안의 발전과 저개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관계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후진국의 식민통치경험과 정치적 독립의 성격규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식민통치의 시기에 있어서 선진국의 발전은 괴식민지로부터의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정치적 독립의 쟁취가 이러한 관계를 의미 있게 바꿔놓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 제국주의’에 의해 세계체계의 역학을 보는 Galtung(1971, pp.82-117)은 제국주의를 식민주의(colonialism),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신신식민주의(neo-neo-colonialism) 등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최초적 점령형태의 식민주의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모습을 감추게 되지만, 운송수단과 커뮤니케이션수단의 발달로 생긴 국가간의 강한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송수단과 커뮤니

케이션 수단은 직접적인 지배 없이도 정확하고 빠른 통제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 커뮤니케이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가연계의 국제조직(예컨대, 다국적기업)이 출현하여 식민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조직은 그들의 후진국 종속화기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해체되기도 하지만, 국제조직 같은 지속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고도로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국가연계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Galtung은 제국주의적 논리가 모습을 달리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논리 속에서 보면 중심부 내보다는 주변부 내의 이해 부조화가 더 크며, 중심부의 중심과 주변부의 중심 간에는 이해의 조화가, 중심부의 주변과 주변부의 주변 간에는 이해의 부조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심과 주변의 상호작용은 수직적인 성격을 지니는 봉건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Frank(1969)도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이라 는 개념으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간의 관계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제3세계의 저발전은 자본주의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 즉 선진국이 역사적으로 이미 거치고 지나간 단계라고 하는 기존의 논리를 부정하면서 후진국은 과거 미발전의 상태는 있었을지언정 한번도 저발전의 상태에 있은 적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후진국의 저발전은 당시 선진국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후진국의 저발전은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특징이나 구조의 산물이 아니고 현재 발전해 있는 선진 자본의 중심국가와 주변 위성국이 맺어 온 지속된 역사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Wallerstein은 Galtung이나 Frank와 같이 국가간의 관계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는 공감하지만 세계를 독립된 주권 국가들의 상호작용으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바로 하나의 통합된 사회체계로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했다(Wallerstein et al., 1982). 이러한 세계체계의 성격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서 중심, 반주변 그리고 주변의 세 가지 국가군에 의해 불평등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근대세계체계는 영국의 매뉴팩춰가 등장한 시기인 16세기부터 나타나 19세기 초반 이후에는 전 지구상에 확대되어 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중심, 반주변, 그리고 주변의 개념은 경쟁적인 자본주의체계의 속성으로 인한 세계체계내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범주로 쓰인다. 이 세계체제론에서도 역시 지배의 양식은 제국주의로 설명된다고 하겠다.

대개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제국주의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종속의 전환가능성(convertability of dependency)이 부문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존의 권력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치적 통제나 경제적 예속에 부가해서 중심부 국가의 이데올로기, 신념체계, 가치 등이 주변부의 국가들에 이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에 관한 논의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주변국의 미디어체계 및 그 내용물인 정보가 중심국의 경제문화에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고전적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서 현대와 같은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미디어역할은 경제적 결정체로써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생산체로서의 미디어역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소유되고 있는가 하는 하부구조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그러한 소유형태에 따라 미디어의 내용물인 상부구조가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Murdock & Golding 1979). 미국 및 영국을 위시한 세계경제 중심국가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체들은 그들의 이윤폭을 넓히기 위하여 미디어산업과 연결된 음반, 출판, 영화 등의 여러가지 방계산업을 합병시켜 초기업화(conglomeration)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초기업화된 소수의 미디어 산업체들은 다양한 문화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 미디어업체들을 말살시키며 최대한의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현상유지 및 체제순응적인 내용물을 주로 전달하게 된다(Smythe 1977).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범세계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방향적 정보의 흐름’(Nordenstreng & Varis 1974),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위한 부속기구’(Mattelart 1979)와 같은 미디어 비판이 등장하게 되었다.

첫번째 시각이 주로 중심국가 내에서의 미디어 합병 및 그 영향력을 논한 반면, 두번째 시각은 주변국가인 제3세계국가들의 대내외적인 종속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어떤 한 나라를 특정 개별국가로서 파악하기보다는 현대 세

계체계 안에서 다른 나라들과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기적 연대관계가 상호조화적인 균형상태가 아니라 범세계적 생산관계에 의거하여 철자하게 불균형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제3세계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을 하였지만 오랜 기간동안의 식민지생활 및 취약한 내부적 상황들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문화적인 측면까지 종속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중심국의 주변부에 대한 지배는 주로 다국적기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주변부의 토착지배계급과 이익의 일치를 이루는 다국적 기업들은 정치경제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전파기구로써의 커뮤니케이션산업에 중점을 둔다(Schiller 1969).

이 경우 발전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해야 할 역할은 우선 교육이다. 저개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저발전의 상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위낙 규모가 크고 구조적이어서 쉽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세계체제의 본질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아울러 국제·국내적인 불평등 구조의 재편성을 위한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전략으로 체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 동기유발의 역할을 위해 종속과 이탈의 시각은 대중매체보다는 대인매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이유들은 후진국에서의 대중매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므로 다국적 기업의 광고에 운영비를 의존하는 등 이미 종속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그것의 능동적인 지지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국내적인 구조변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커뮤니케이션전략도 성장과 균배의 시각에서와 같이 저발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누락되지 않았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전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분석에서도 종속에 따른 현실 상황을 과장한 듯한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 중심과 주변과 같이 지극히 단순한 범주로 세계의 많은 나라의 경우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따르며 발전의 외생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내생적 요인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발전의 외부적 제약을 파악하는데 많은 이론적 기여를 한 것으

로 사료된다.

라. 자립적 발전의 시각

근래에 부각된 발전에 관한 많은 전략들을 통합하는 이 발전논의는 ‘자립’(self reliance)의 개념을 그 골간으로 한다. 여기서 자립이란 단순히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제협력과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보다 균형잡힌 관계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자립은 국가나 지역들간의 불균등한 관계의 제거를 기본이념으로 한 사회의 독자적인 발전과 사회 내의 각 부문들의 통합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의 발상은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제거하는 실천적인 명제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는 시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 행해지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립은 결국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총족에 도달하는 방법이며 그러한 자구적인 형태로 사회가 조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립적 발전을 위한 최대의 자원은 대중 그 자체이며, 자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 참여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중들의 누적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들의 문화적 성향,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대중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 자립적 발전론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연결시켜 보면 그것은 서구적인 발전전략과 목표를 모방하고 그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본적인 욕구를 고려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 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모습의 발전을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결정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문제까지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생활필수품 같은 것을 균등분배 내지 공유하거나, 의·식·주 등 경제적 권리가 노동에 동참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주어진다거나 하는 것이(Nyerere 1968) 이 자립적 발전론이 생각하는 비서구적인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자립적 발전론은 시장·자원·재정·노동력·과학기술에 대한 한 국가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능력의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종체적인 발전논의로서, 이 자립적 발전의 시각은 발전전략의

완수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전략에 있어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Hamelink 1983) 고려하고 있다. 먼저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차치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정책원칙이 설정되어서, 그에 따라 수립된 구체적인 계획으로부터 이를 전개하기 위한 내생적 차원을 동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전략은 대체로 대인커뮤니케이션채널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선 각 지역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와 경험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를 구하기 위해 대중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적 발전론의 커뮤니케이션전략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심국가의 문화산물의 특정유형이 다국적 광고 등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일시에 대량으로 위성국가에 유통되어 ‘동시유행’(synchronous mode)을 만드는 일방적인 문화적 이입에 대한 저항전략이다. 캐나다, 모잠비크, 쿠바, 탄자니아, 중공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들이 하나의 사례로 들어질 수 있겠으며, 세계의 각 지역별 뉴스교환이나 IPS같은 것이 또 다른 실례라고 하겠다.

문화적으로 정체감을 표방한다는 것은 사회성원들이 자기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적·상징적·사회적 유형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 문화적 자기주장의 과정 속에서 환경에 적합한 문화체계를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내용과 그 표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적인 문화체계만이 그 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회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전략은 항상 정치적·경제적 자립을 전제로 할 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3. 한국의 경제발전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 작용과 반작용

제 3 세계의 후발신생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국가와 언론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여년에 걸친 개발연대의 시기에 있어 국가가 홍보의 기능을 강조해 왔다면 언론은 계도의 기능을 중시해 오면서 일종의 공생적인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위상

일제 하의 식민지 경험과 외세에 의한 민족의 해방은 국토의 분단과 함께 바람직한 국가발전의 방향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애초부터 약화시켰다.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관권에 결탁된 소수의 신생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경제운용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는 제 I 공화국의 시기에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다. 4·19의거에 의해 출범된 제 2 공화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제한적 표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약과 무능으로 인하여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5·16군사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 제 3 공화국은 여러가지 강제수단을 동원해 집권초기에 권력기반을 다지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급속한 경제발전의 추진으로 귀결되었는데 한국의 본격적인 발전커뮤니케이션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해방 후 제 2 공화국 시기까지는 반공,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등 정치적인 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근간을 이루는 쟁점이 되었으며 언론활동의 지배적인 형태나 그 역할에 대한 주요한 논리는 서구선진사회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비록 통일논의에 대한 제약 등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승만 자신의 자유주의 언론관과 항일민족의식을 계승한 언론의 철저한 투쟁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언론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4·19의거 이후 약 1년동안은 자유언론의 황금기가 구가되었다. 1960년 6월 15일 공포된 신헌법 제13조와 제28조의 조항은 이를 보장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²⁾

1962년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국가의 발전전략은 언론매체의 숫자를 줄이고 그 보급량을 늘리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잡는다.

1962년 6월 28일 군사정부에 의해 발표된 새 언론정책은 이러한 커뮤니케

(2) 제13조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 제28조 :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기본권 제한의 한계)…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이선전략의 줄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을 강조하여 통신사의 자진통합권장(세부방침 제3항), 무실력업체의 자진정리(세부방침 제1항)를 권장하고, 신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세부방침 제2항), 그리고 신문용지와 원독의 수입관세인하(세부방침 제7항)를 약속한 대목에서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사의 윤리성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강조(세부방침 제17항)하고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세부방침 제9항)하려 하였으며, 정부취재원에 대한 완전개방을 지양(세부방침 제18항)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취재활동과 윤리규범에 대한 별도조절(세부방침 제19항)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품위와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활동 촉진(세부방침 제13항), 신문회관 건립(세부방침 제15항) 적극 지원,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세부방침 제4항)을 약속했으며 무보수기자의 채용·존속임금(세부방침 제20항)과 보도위주의 제작에서 교양위주의 지면제작으로 유도하고 조·석간지를 단간제로 정착시키려 했으며 증면을 권장(세부방침 제4항)했다.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고 언론에 대한 물질적, 재정적 후원을 약속하여 증면과 매체통합의 의지를 표명한 이 새로운 언론정책은 61년 5월 18일에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발표 제4호에 비해 그 표현상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권장적 압력’(김진홍 1983, p.51)에 의한 언론통제정책으로의 전환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그러나 같은해 1월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안되었다는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환을 좀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계획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국가의 강력한 동반자로서의 언론의 보조적 역할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언론의 의견표출을 국가가 막거나 단순히 제재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고, 언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발전정책에 동참하여 그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특혜를 받아 제도권 내에 있어야겠고 언론인의 의식도 국가발전을 위해 ‘방종적인’ 자유는 ‘책임있는’ 참여로 이끌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언론정책은 단순한 소극적 통제의 개념에서 보다 세련된 적극적 통제로의 전환으로 파악되며 발전정책에 커뮤니케이션매체의 적극활용을 그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전정책을 적극 홍보

하고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언론을 적극 이용하려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전략의 방향은 그 결과 한 예로서 일간신문의 경우 간행물의 숫자는 61년 5월 1일 현재보다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발행부수는 꾸준히 증가되었다. 문공부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5·16 직전 61년 5월 1일 현재 115종의 일간신문이 발행되던 것이 61년 12월 31일 현재 38종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문화공보부 1984, p. 271). 그리하여 70년과 71년에 44종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일 뿐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발행부수는 61년 모든 신문의 경우를 다 합쳐 821,981부(문화공보부 1973, 팽원순 1978, p. 214에서 재인용)가 발행되던 것이 70년대 말까지 중앙에서 발행되는 전국지의 경우 적어도 1개 신문의 발행부수가 1백만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정호 1982, p. 84).

추광영 교수(1986)는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한 특징을 군부정치참여 엘리트들의 정통성 구축을 위한 정치적 변인의 합축적인 수단적 변동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의 정통성 획득을 위한 경제개발의 와중에서 매스미디어는 상징조작과 개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언론'으로서만 가능한 반면에 이윤추구 동기에 따른 상업주의 또는 기업주의가 팽배하여진 점이 또 하나의 지나간 개발연대의 한국 매스미디어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제3공화국 이후의 정부는 경제개발분야에서는 어느정도 실적정통성(legitimacy based on economic achievement)을 획득하였지만 체제정통성 획득이라는 면에서는 실패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언론은 체제의 강력한 언론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통제는 신문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센세이셔널리즘으로부터 흥미본위의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전환케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적정통성이 언론으로 하여금 기업성 추구를 지향케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는 방송매체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송은 문자해독이라는 또 다른 능력을 수용자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과 계몽이라는 고전적인 발전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라디오수상기의 경우 63년이래 격년 5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여(문화공보부 1973) 문공부에서 실시한 전국표본조사결과를 보면 78년 7월 현재 이미 도시·농촌간의 편차없이 전체 응답자의 95%가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정호 1982, p. 85).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

우도 65년까지는 저조한 성장을 보이다가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66년 이후 격년 100% 이상의 증가현상을 보여 70년에는 379,564대 75년에는 2,061,072대로 전체가구의 30.5%의 소유율을 보이던 것이 80년에는 6,267,584대로 78.6%의 소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이때부터는 칼라 텔레비전도 등장하여 총 138,745대 1.8%의 소유율을 보였는데, 1984년 현재 텔레비전 총 보급대수는 7,677,104(칼라: 4,176,730)대로 가구당 84.3%(칼라: 45.9%)의 소유율을 보이고 있다(경제기획원 1985, p.289).

한국에서의 발전정책과 커뮤니케이션전략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리 순탄한 경로를 걷지만은 못했다. 발전정책의 경우 60년대 말까지 호황을 누리던 세계 경제가 70년대 초에 들어 침체하게 되어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지역·계층간에 표면화되었다. ‘교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의 틀 안에 위치지워지는 한국의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대외지향적 발전정책을 그 핵심적인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일종의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the strategy of promotion by invitation)’으로 그것의 강점은 국내의 미약한 경제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막대한 외국자본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데 그 약점이 있다(Wallerstein 1979, p.81). 그 결과 외국자본에 의한 수출증진 공업화에는 성공하여 외연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의 존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유가파동을 전후로 국내경제는 경기위축과 이에 따른 축적과 분배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외국자본에 의한 종속적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향한 결과 민중부분은 배제되고, 강렬한 노사갈등을 표면화시켰던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정된 용량만이 허용되는 전파매체의 경우는 공유재산이라는 전파의 성격상 처음부터 허가제로 시작되어 그 경우가 다르나,⁽³⁾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인쇄매체인 신문은 등록제로서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하여 비판세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

(3) 이에 부가하여 한국텔레비전방송의 경우 첫 방송국(HLKZ-TV)이 미국산(RCA)수상기의 판매를 위한 상업방송으로 시작하였으며 보도프로가 거의 없는 오락매체로 초기 프로그램이 이끌어져 왔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되어 왔고 또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의 신문은 19세기 말에 첫 헛빛을 본 독립신문 이래 그리고 두 민족으로 명맥을 이어 온 일제치하를 뛰뚫고 다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극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민’의 신문으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최정호 1974, p. 79). 그러한 전통은 신문을 여타 대중매체의 일부로 파악하고 대중동원의 한 설득수단으로 동원 하려는 국가의 발전전략과 마찰을 빚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진국형 언론자 유의 전통과 후진국형 발전언론의 정책이 갈등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부극간(持斧極諫)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언론사상(김영주 1984, pp. 419-41) 이 신문의 민(民)의식을 더욱 고무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도끼를 몸에 지니고 가서 말이 들어지지 않을 경우 그 도끼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옳게 간(諫)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자의 마음자세를 규정한 조선시대의 윤리규범인데 독립신문의 제 1호 사설 “우리는 바른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그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오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일 터이오”에 나타난 대관투쟁정신(對官鬪爭精神)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철저한 투쟁정신과 지속적인 대관비판정신은 72년에 실시된 한 언론인 의식조사(오인환의 1978 pp. 258-7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언론이 ① 변해 가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② 새로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보급해야 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③ 국민전체에게 국민의식을 심어 주는데 공헌해야 한다는 역할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국가계획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지향했던 국가는 72년에 프레스카드제도를 만들고 73년에는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여 위로부터 결정된 정책의 효과적인 대중전달과 설득을 위한 수단을 강화해 왔던 것이다.

62년 군사정부의 새로운 언론정책 아래 언론의 통폐합으로부터 80년의 언론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 아래 일관되게 요구되어온 대중계몽·동원수단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언론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하게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유신정권 수립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오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통치엘리트들은 기존 논리대로 성장정책

을 지속하고 있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인 동원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언론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학생·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부문에서는 성장결과의 고른 분배, 대외의존의 탈피, 그리고 정치의 민주화 등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대기업화한 대중매체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대인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 국민경제의 성장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60년대의 개발정책 수립 이후 국가주도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하여금 발전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정책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한 것으로는 정부활동의 홍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대해 강력한 통제정책을 쓰면서 이를 이용한 담화문발표 등의 정부홍보활동은 일정시기별로 별개의 호소력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인지구조에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윤희중 1984, p.217). 그러나 언론매체가 국가의 발전정책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국가의 경제성장이 대중매체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으로는 매체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저하이다. 신문의 경우 매체종류는 줄어든 반면 보급량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중앙 1개지의 발행부수가 일백만부에 달하는 엄청난 양적 증가를 보여왔다. 이렇게 하나의 큰 기업으로 성장해 버린 언론사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여 여러계층의 다양한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 신문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신문내용의 대중화를 불러 일으켰고 이것은 과거 지식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던 언론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질이 저락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락과 교양의 제공이 주기능인 방송의 경우는 그러한 상대적인 경향의 변화를 찾아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모는 주로 경영과 편집이라는 언론사의 이중구조에 의해 결과된 언론매체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이다.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시기를 ‘대학·언론 연계체(university—press nexus)에 의한 통치’의 시기로 평가할(이한빈 1968, pp.169-72, 최정호 1974에서 재인용) 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말의 한 조사

보고(박권상 1979)에 따르면 국민은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77.1%)가 ‘공정보도로 독자를 계도하고 있다.’ (2.6%)는 견해가 대조되고 있듯이 언론에 대해 심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중매체의 폭발적인 보급과 병행되었던 언론의 산업화가 언론인의 힘보다 언론기관의 소유자·경영자의 힘을 강화하여, ‘메세지’에 대한 ‘미디어’의 우위, ‘메세지’를 가진 사람·발언할 내용을 가진 사람에 대해 ‘미디어’를 가진 사람·발언의 수단을 가진 사람의 우위의 확립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뜻한다(최정호 1982, p. 95).

국가의 발전이 대중매체에 끼친 이러한 적절적인 영향에 못지 않게 그것은 언론에 관련된 문화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혼재상황이다. 이것은 홍보능력의 제고와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지향한 성장정책의 결과 급속하게 진전된 매체 특히 방송매체의 보급이 다른 과학기술의 보급보다 빨라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운기보다는 지게와 리어카로 짐을 나르고 수도물보다는 샘물을 마시며 수세식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것이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다(이상희 1984, p. 51). 이러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혼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발전의 촉진가능성과 사회해체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대중매체의 정보확산 결과 의식세계가 실제생활보다 약간 앞서는 경우 즉, 둘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사회성원의 기대수준은 상승하여 그 결과로 사회발전을 촉진하게 되나 간격이 너무 멀 경우에는 상승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 주는 괴리감이 좌절을 초래하여 사회해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층·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혼재형태는 후자의 양상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앞서 나왔던 논의의 결과로, 매체의 빠른 보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사회체계 전반에 널리 또 빨리 확산하기 위한 방송기재의 도입이 야기하는 문화·기술 종속의 문제이다.

일제치하의 한국의 방송수준은 식민정책의 매개자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내용면에 있어서 자생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민족의 해방을 맞게되자 경

협과 기술의 부족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방송의 모든 운용을 미군정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여타의 원조와 같이 낙후된 방송기재의 개조와 교류를 위하여 방송기자재의 원조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곧 이러한 방송장비의 조작과 보수방법을 배우기 위한 기술진의 도미연수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장비의 선호로 결과되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매체장비의 도입으로 끝나지 않고 편성내용의 선호로까지 연결되었다(한국방송공사 1977, pp. 199-201). 예컨대, 1947년 8월에 시행된 기본방송순서의 대폭 개편에서는 미국에서 인기있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다수 도입되었다.⁽⁴⁾ 이러한 경향은 60년대에도 계속되어 골든 아워인 저녁 8시대에 외화(주로 미국산)가 일주일 내내 편성되기도 하였다.⁽⁵⁾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국내제작프로그램을 더 들리고 싶어도 들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기술과 비용의 부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송장비의 국내생산이 어려운 실정 아래에서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국규모의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의 시급한 확립이 강요한 그 장비(hardware)의 도입은 결국 그 내용(software)을 채울수 있는 능력의 결여와 함께 장비를 도입한 쪽에 내용까지를 일반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미비된 상태에서 기술도입이 이루어 질 경우 대개 종속의 상태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방송의 경우 장비는 내구재인 반면 내용은 소비재이므로 국내능력이 축적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그 내용물의 도입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특정회사나 국가의 기재나 그 내용물이 다른 회사나 국가의 그것과 호환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데 있다. 84년의 한 연구 결과(강상현 1984, pp. 77-118)는 이러한 대외의존의 편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KBS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사장비의 69.2%가 미국제품이며 또한 방송외화(영화극장)의 경우도 전체의 91.3%가 미국산 영화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의존이 내용의 종속현상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민 개

(4)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사해설”, “스무고개”, “거리의 화제”, 그리고 “천문만답” 등이 있다.

(5) 한 예로 1964년 개국당시 TBC의 외화프로그램을 보면 일요일 8시 “보난자”, 월요일 7시 10분 “탈출”, 화요일 8시 30분 “페티코트 작전”, 수요일 8시 30분 “알반 쇼”, 목요일 8시 30분 “휘파람부는 사나이”, 그리고 일요일 6시 30분 “미스터 부싯돌”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상회, op. cit., p.123.

개인에 대해 문화적 종속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뉴 미디어에 관련된 정보화 사회의 논의도 일면에 있어 이상의 종속 논리와 맥락이 닿는 것으로 보인다. 다미디어, 디채널로 특정지어지는 뉴미디어의 출현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보다는 불행하게도 시장원리에 의하여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리가 미국의 세계문화지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정책이라는 음모에 기초가 있는 한(이강수 1985, pp. 41-2) 정보화 사회와 함께 거론되는 사회발전을 위한 뉴미디어와 뉴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앞서의 미디어 기술체계 수용에 따르는 문화종속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자립적 발전을 위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후기-후발의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논리로 설명되는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노정해 오고 있다. 지체된 공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체의 누증이 그 하나라면 불균등 분배의 심화가 다른 하나이다. 탈절과 배제로 특정지워질 수 있는 종속적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경제제약이 개발의 두 연대에 걸쳐서 한국 사회를 정치적인 면에서 억압적으로 구조지워온 것으로 보겠다. 현대적 권위주의로 지칭될 수 있는 기존의 상황은 그대로 언론정책에도 반영되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정책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여러 시각들이 나름대로의 현실진단 아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발전정책은 권위주의적이고 설득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언론과 국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강압과 유인의 양면적인 언론통제정책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왜곡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고 굽기야 언론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풍조를 낳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홍보와 대중동원을 위한 언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매체의 보급에 주력한 결과 언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은 언론에 미치는 적절적인 영향 외에

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방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정부가 수용한 기술이나 개발의 아이디어를 널리,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하여 장비의 운용과 그 내용물의 제작에 필요한 인적·재정적·시설적인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기자재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기술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으며 그 내용물마저 외국에 의존하는 양상을 초래하여 문화종속의 가능성은 높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추진된 커뮤니케이션의 보급이 다른 과학기술의 보급보다 빨라 일종의 문화지체 아래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혼재를 낳고 그것은 기대수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사회해체와 사회발전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인공위성과 컴퓨터와 같은 기술발달은 전세계를 하나의 정보체계의 방 안에 편입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중심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제3세계의 경우 문화종속의 정도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Schiller 강현두역, 1984).

경제개발의 두 연대를 보내고 난 지금의 우리 현실은 더 이상 대외의존적인 성장지상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해서는 안될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던 성장정책에 근본적인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정과 균형은 얻어질 수가 없기에 민족경제로 향한 구조적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제도라는 공유되어야 할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경제의 기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언론 의적인 방법에 호소되고 있는 여러가지 국민적 여망을 언론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사회 안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언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한국언론의 신뢰성회복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언론정책을 수정하여 언론에 대해서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수렴의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성장주의의 방향타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생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축증대, 기술축적, 외제배격 등의 노력은 여론형성을 통한 정책반영에 의해(Parlic & Hamelick, p. 27) 국민의 총체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강력한 매체보급정책의 결과 만족할만한 커뮤니

케이션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채널을 바탕으로 국민전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를 기초로 우리의 힘을 어디로 모아갈 것인지 그 잠재적 역량의 개발을 위해 애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5.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발전과 커뮤니케이션전략에 관한 제반 시각을 알아보고 한국에서의 발전정책과 그 정책이 지향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특히 신문과 방송에 관하여 정부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왔는지를 분석하여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위상을 따져 보았다. 아울러 이런 성장지상주의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전략을 채택한 국가의 발전정책이 그 결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도 알아 보았다. 그리하여 한국의 발전정책의 현주소가 어디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 보았다.

한국의 발전은 대외지향적인 후기-후발의 종속적 자본주의 변화과정에 위치되는 바, 이러한 사회변화가 갖는 논리가 현대적 권위주의임을 지적했다. 그 결과 언론전략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통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의 팽배와 언론 외적인 수단을 통한 언론행위의 단연으로 귀결되어진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의 종속적인 특성 외에도 대중계몽·정책홍보·기술개발·정보소통을 위한 전달기제의 급속한 구입에 노력한 결과 내부의 기재운용능력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문화 종속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다. 또한 다채널·다미디어로 말해지는 뉴미디어-뉴테크놀로지의 도입도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할 만한 자립기반의 미비로 과거의 매스 미디어 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됨을 알았다.

이러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발정책은 자립적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민중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개방적인 언론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여론형성을 통해 대중 참여를 유도하도록 경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가의 지금까지

의 적대적인 공존관계가 경제와 균형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실천전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을 차후의 계속되는 연구에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뉴미디어와 뉴테크놀로지의 정보화사회와 발전에 관한 논의, 초국가적 자료유통(transborder data flow)과 발전에 관한 논의, 그리고 다국적 광고기업의 국내광고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강상현

1984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체계 수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경제기획원

1985 한국의 사회지표

김진홍

1983 언론통제의 정치학, 서울:홍성사

김영주

1984 “한국언론사상원류고” 경상대 논문집 11

문화공보부

1984 국내정기간행물 일람표

문화공보부 홍보조사연구소

1973 전국홍보매체실태

박권상

1979 “한국언론의 당면문제” 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주제논문, 1979. 10. 16

오인환 외

1978 “언론인과 발전커뮤니케이션”, 신문학보 10.

윤희중

1984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나남

이강수

1985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와 문화적 환경-사회문화적 임팩트를 중심으로”, 한국전기통신 100년 기념 심포지움, 정보회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이상희

1984 TV방송과 대중문화, 서울:전예원

이한빈

1968 사회변동과 행동, 서울

최정호

1974 “한국에 있어서의 신문화와 발전의 갈등”, 한국미래학회, 발전과 갈등

1982 언론문화와 대중문화, 서울:민음사

추광영

1986 “1960~70년대의 한국의 사회변동과 매스미디어”, 사회과학 제25집,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팽원순

1978 “한국의 매스미디어 보급”, 신문학보 10
한국방송공사(편)

1977 한국방송사

Barnlund, D.C.

1970 “A Transactional Model of Communication”, in Sereno, K.K. & Mortensen
(eds.),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erlo, D.K.

1960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Practic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Dissanayake, W.

1981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Four Approaches”, *Media Asia*,
Frank, A.G.

1969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or Revolutio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Galtung, J.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17, 2
Hamelick, C.J.

1983 *Cultural Autonomy in Global Communication: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Policy*, New York: Longman Inc.

Inkeles, A. and D.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Lasswell, H.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Bryson, L.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Y.,

Lerner, D.

1963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Modernization: A Set of Considera-
tions” in Pye, L.(ed.), *Communi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ttelart, A.

1978 “The Nature of Communications Practice in a Dependent Society”, *Latin
American Perspective* 16(1978), 1.

Mattelart, A.

1979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Control of Culture*, New Jersey:

- Humanities Press.
- Murdock, G. and P. Golding.
- 1979 "Capitalism, Communication and Class Relations", in Curran, J., Gurevitch, M. and J. Woollacott(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Sage.
- Nordensreng, K. & H. Schiller.
- 1979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
- Nordenstreng, K. and T. Varis
- 1974 *Television Traffic: One-way Street?*, Paris: UNESCO
- Nyerere, J.K.
- 1968 *Freedom and Soci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arlic, B. and C.J. Hamelick
- 1985 *The New Economic Order: Links between Economics and Communications*, Paris: UNESCO
- Rogers, E.M.
-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The Free Press
- Rogers, E.M., (ed.)
- 1976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Critical Perspectives*, Beverly Hills: Sage
- Rogers, E.M. & D.L. Kincaid
- 1981 *Communication Networks: Toward a New Paradigm for Research*, The Free Press
- Rostow, W. W.
- 1961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chiller, H.
- 1969 *Mass Communication and American Empire*, New York: A.M. Kelley
- 1984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강현두 역,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제국주의, 서울: 현암사
- Schramm, W.
- 1963 "Communication,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 Pye, L. (ed.), op.
- 1964 *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Smythe, D.
- 1977 "Communication: Blindspot of Western Marxis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3
- Sola Pool, I. de
- 1963 "The Mass Media and Politics in the Modernizing Process", in Pye, L. (ed.), op. cit.
- Wallerstein I.

- 1979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in Wallerstein, I.,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Wallerstein, I., et al.
1982 *World System Analysis: Theory and Methodology*, Beverly Hills: SAGE